

배포 일시	2023. 1. 19.(목)		
담당 부서 <총괄>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 (044-201-4990)
			주무관 손재협 (044-201-3498)
보도일시	2023년 1월 1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전국 1,494곳 건설현장에서 2,070건 불법행위 접수 - 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 ... 19일 4차 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-

◆ 주요 피해사례

- ▶ ○○건설사는 최근 4년('19.1~'22.11)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레비 등 697회, 총 38.0억원 지급
- ▶ △△건설사는 '21.10월, 같은 시기에 ▽▽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,547만원 지급 (1개 노조 당 100~200만원)
- ▶ □□건설사는 '21.10~'22.2. 기간 동안 ◇◇◇◇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,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 받았으며, 결국 '22.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'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' 결과를 발표하였다.

-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·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·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,
 -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.

◆ **건설 관련 민간 유관협회 실태조사 개요**

- 기간/주관기관 : '22. 12. 30.(금) ~ '23. 1. 13.(금) / 국토교통부
- 참여 기관(12) :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한국주택협회, 한국주택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한국레미콘공업협회,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, 서울경인인천/부산울산경남/대구경북/광주전남제주/대전세종충남 철근콘크리트 연합회
- 조사방법 : 각 협회·연합회에서 조사 양식을 회원사에 배포 후 취합, 국토부 제출

□ ‘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’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○ (제출 업체 수)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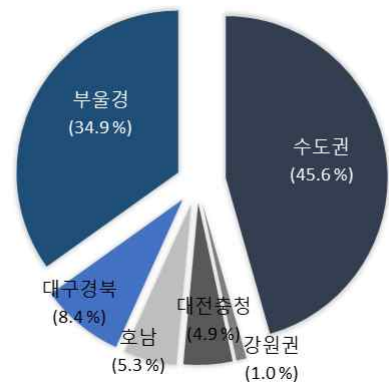
- 이 중, 133개 업체는 월레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,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○ (피해현장 수) 또한,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,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, 부산·울산·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%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*되어 있었다.

* 대구·경북권(125곳), 광주·전라권(79곳), 대전·세종·충청권(73곳), 강원권(15곳) 순

< 피해사례가 접수된 권역별 건설현장 분포 현황 >

수도권	강원권	대전세종충청권
681 (45.6%)	15 (1.0%)	73 (4.9%)
광주전라권	대구경북권	부산울산경남권
79 (5.3%)	125 (8.4%)	521 (34.9%)



○ (불법행위 유형)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, 총 2,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- 이 중, 월레비 요구가 1,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,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 외, ▲장비 사용 강요 68건, ▲채용 강요 57건, ▲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되었다.

< 유형별 분류 (1.18. 집계 기준) >

채용강요	장비사용 강요	타워크레인 월레비	전임비 등 강요	기타 부당금품 요구	태업
57 (2.8%)	68 (3.3%)	1,215 (58.7%)	567 (27.4%)	17 (0.8%)	38 (1.8%)
현장퇴거 명령불응	출입방해	임의추가 인력투입	레미콘		
			집단운송거부	계약강요	운반비 담합
16 (0.8%)	25 (1.2%)	16 (0.8%)	40 (1.9%)	3 (0.1%)	8 (0.4%)

○ (피해액) 아울러,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,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,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-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,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며,
- 타워크레인 월레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

○ (공사지연 일수)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,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*된 사례도 있었다.

* ○○개발 사례 : △△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,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 4개월 공사 지연

□ 이번 실태조사는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, 신고가 계속 접수 되는 상황이며,

-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.
 - 이와 함께,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·고용노동부 지청·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금일 오후에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·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다.
 -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앞서 1~3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▲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, ▲타워크레인 월레비, ▲채용 강요, ▲장비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” 라며,
 - “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, 숨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” 라고 강조했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” 고 당부하며,
 - “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” 라고 전했다.
- ※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(☎1577-8221) 또는 경찰청(112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